

“기아차 공장·우주발사체 관련 기업 이전 등 급선무”

광주시
車 공장 2곳... 연 72만대 생산
충남·전북·대구 등 차별화 시급

전남도
우주발사체 부품 기업 200여곳
민간기업 유치·이전 노력 절실

광주시와 고흥군에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자 지역 경제계에도 활력이 되는 분위기다. 생산 유발, 고용창출 등 수주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되지만 선결돼야 하는 과제들도 산적하다.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 인근에 337만㎡(102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6700억원을 투입,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지원팀을 구성해 시행사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업 유치 등 행정 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산단 조성을 서두를 방침이다. 주력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플랫폼,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부품인증센터, 자율주행 평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지능형 미래차 실증 클러스터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2개 완성차 공장도 전국 두 번째인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데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해 미래차 선도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생산 설비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1998년 완공돼 설비가 노후화 된 데다 내연기관 중심 생산설비를 갖춘 상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선 전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 성공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환경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심 중심에 위치해 교통체증으로 부품기업 접근성이 낮아 원활한 부품 공급 및 적재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큰 만큼,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기아차 광주공장 및 주요 협력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주영 광주테크노파크 책임은 “미래차 전환 실패로 광주 최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붕괴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기아 광주공장 및 주요 협력사를 이전해 광주 자동차산업의 집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한 광주시의 의지도 강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 선도도시가 지금 우리에게 꿈이자 위기일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한다면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

장하는 한편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 미래차 산단 조성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다른 주력사업이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제1호 상생협력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발표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별개지만,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한 대규모 반도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광주·전남에 별도로 반도체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미래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도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인다.

광주시와 함께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15곳 중 충남 천안(미래 모빌리티·반도체)과 홍성(수소·미래차·이차전지), 전북 완주(수소저장·활용산업), 대구(미래차·로봇)와 일부 영역이 겹칠 수 있어 경쟁력과 차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산단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등 ‘앵커 기업’ (선도기업)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미래차 산업과 산단 육성 계획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자율주행 선도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자부에서는 국가산단 후보지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별개라고 들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

정을 위해서도 전남도와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사진인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흥 역시 기업유치가 중요한 과제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관계 기관들의 산단 내 입주 수요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주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37만개로 국내에 관련기업은 약 20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해당 기업들의 현황 파악을 완료하고 향후 우주발사체 산단에 입주 수요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사체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대전·사천 등에 분포돼 있어 전남도의 기업 이전 등 유치 전략도 중요해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전남도가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지·최황지 기자

20일부터 지하철·버스서도 마스크 벗는다... 의무 전면 해제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서도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오는 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임 단장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1주 1만6103명에서 3월 2주 1만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60명에서 11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임 단장은 “고위험군, 증상이 있으신 분

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은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 시에만 의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위기단계 조정이 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계해 나머지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